

주간 통일정세

2014-32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北 조평통 성명, 5·24조치 해제·한미훈련 중단 촉구(8/1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에서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요구가 더욱 뜨겁게 분출하는 이번 8.15를 계기로 북남관계에서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면서 ▲주한미군 철수·남한의 '외세의존정책' 중단 ▲6·15공동선언 등 기존 남북합의 이행 ▲한미군사훈련, 5·24 대북제재 조치 등 적대행위 중지를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전함.
 - 성명은 또 한미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중단을 요구하고 "조선반도에서 '비정상'의 극복은 바로 미국의 남조선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함.
- 북한군, 한미군사훈련 UFG연습 대응 '선제타격' 위협(8/1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7일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UFG 연습에 대해 "미제의 날강도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그에 발벗고 추종해 나르고 있는 남조선 괴뢰들이 동족대결 책동에 따라 고안된 북침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성명은 이어 "올해에 강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맞춤형 억제라는 기만적인 외피를 쓰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선제타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핵전쟁연습"이라고 덧붙였다.
 - 또 "우리가 때리면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은 구실 없이 얻어맞아야 하며 우리가 결심하면 침략의 크고 작은 본거지들은 불바다가 되고 잿더미가 되어야 한다"며 "우리 혁명무력은 이미 그렇게 만들 만단의 준비태세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조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반드시 결산해야 할 침략군의 성노예범죄(8/1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駐韓美軍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 성매매' 관련 재차 韓美당국에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 수치도 모르는 패륜아들'이라며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사대매국노들의 반역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함.

- 北, 광복절 맞아 체제 선전·南 정통성 폄하(8/15, 노동신문; 조선중앙TV)
 - 노동신문은 15일 '식민지 괴뢰의 가소로운 정통성 나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남한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폄하하며 "친일·친미의 더러운 땃줄을 잇고 사대와 외세 의존으로 민족을 반역해온 남조선 괴뢰들은 8·15와 관련해 그 무엇을 말할 자격조차 없으며 오히려 얼굴을 붉혀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중앙TV도 15일 '조국광복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를 방영하는 등 광복 69주년 경축 분위기를 띄웠으며 '백두산지구 혁명사적지'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 '업적'을 부각함.

- 北 "발사체 발사 교황 방한과 무관·관심도 없어"(8/1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과학을 담당하는 제2자연과학원의 김인용 로켓탄연구실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에 기고한 글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우리의 이번 전술로켓탄 발사가 나라의 평화와 화합에 장애가 되고 그 무슨 로마 교황의 서울 행각에 그들을 던지는 도발적인 무력시위라고 온당치 못한 발언들을 함부로 내뱉고 있다"며 "한마디로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윤일병 사건 주범 김관진 처벌해야"(8/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6일 서기국 보도에서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관련 "남조선의 각 계층은 괴뢰군 내 폭행살인 만행의 주범인 김관진 놈을 민심의 이름으로 단단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남북 외교수장, 유의미 접촉 불발…ARF서 조우만(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ARF 회의장에서 서로 맞은 편에 앉은 윤 장관과 리 외무상이 북핵·미사일 문제, 드레스덴 구상 등의 문제를 놓고 대립적인 발언을 한 것을 전함.
 - 리 외무상이 북한의 통일방안인 연방제 통일 방안을 거론하자 윤 장관은 "레토릭에 불과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골자로한 드레스덴 구상이 합리적인 안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함.

- 남북 고위급접촉 19일 판문점 개최 北에 제의(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오전 9시10분께 김규현(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 개최를 제의했다고 전함.
 - 우리정부는 회담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8월 19일을 회담 일자로 일단 제시했으며,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힘.

- 北, 南 대북정책 비난 지속…'체제통일 야망 버려라'(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불순한 체제통일 야망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의 본질은 체제통일"이라고 주장함.
 - 또 신문은 "남조선 집권자는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무슨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대북정책으로 들고나왔다"며 "그가 말하는 신뢰에는 '북이 핵을 포기하면 협력이 가능하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이 달려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음.

- 北, 南 '균형외교' 비난…고위급접촉 제의엔 '침묵'(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수치와 파멸을 낳는 부끄러운 균형외교'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의 '균형외교' 정책이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비난하며 "비굴한 외세 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민족 공조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히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남한 배치 가능성에

대한 '주변대국'의 우려를 언급하며 "균형자적 역할은 고사하고 미국과 주변대국들이 이리 끌면 이리로 끌려가고 저리 끌면 저리로 끌려가면서 그 과정에 오히려 모순과 마찰만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北, 박 대통령 경축사 비난...“남북관계 해결책 없어”(8/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대결의 빗장을 그대로 두고 협력의 문을 열수 있는가'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집권자의 '8·15 경축사'라는 것은 북남관계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고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서 실속이 없는 겉치레, 책임 전가로 일관된 진부한 것"이라고 평가함.
 - 신문은 박 대통령이 경축사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한 데 대해선 "더욱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남조선 집권자가 우리의 핵과 미사일을 걸고 들며 또다시 위협 타령을 늘어놓은 것"이라고 거부감을 드러냄.
 - 또 "인천에서 곧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총포성을 요란하게 울리는 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함.
- 北김양건 통전부장, DJ 5주기 화환 전달(8/17, 연합뉴스)
 - 북한이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5주기를 맞아 보내겠다는 화환이 17일 오후 개성공단에서 우리측에 전달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17일 화환 전달식에는 북한에서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참석했고, 우리측에서는 새정치 민주연합 박지원 의원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 등이 참석함.
 - 앞서 북한은 지난 14일 김대중평화센터 앞으로 보낸 조선아시아 태평양평화위원회 명의 통지문에서 18일 화환을 전달하겠다고 통보했고, 김대중평화센터는 수령일을 17일 오후로 수정 제안한 답신을 지난 15일 전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北어선 1척 서해NLL 침범...경고사격 받고 돌아가(8/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북한 어선 1척이 12일 오전 11시께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군의 한 소식통은 12일 "북한 어선은 오전 11시께 NLL을 넘어왔으며 우리 해군 고속정이 즉시 기동해 경고사격 2발을 가했다"면서 "이 어선은 오전 11시50분께 NLL 이북으로 퇴각했다"고 밝힘.

■ 北 "南이 北어선에 무차별 포사격"…보복 위협(8/1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3일 북한군 '서남전선군사령부 보도'를 통해 "8월12일 괴뢰군부 짱패들은 서남해상에서 정상적인 어로작업을 하고 있던 우리의 평화적 어선을 향하여 무차별적인 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은 "이 무모한 도발광기로 하여 가득이나 침예한 이 수역의 정세는 또다시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폭발 전야의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당시 남한군이 육해공군에 합동경계태세를 발령해 F-16 전투기를 공중에 띄웠고 쾌속정 5척이 연속으로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함.

■ 北, 교황 도착직전 300mm 방사포 3발 동해로 발사(8/14,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탑승한 전세기가 서울에 도착하기 직전인 14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3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방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힘.
- 합참의 한 관계자는 14일 "북한은 오늘 오전 9시30분과 9시40분, 9시55분 등 3회에 걸쳐 원산 일대에서 동북 방향의 동해 상으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고 단거리 방사체 3발을 발사했다"며 "사거리는 220여km로 판단된다"고 밝힘.

■ 北, 300mm 방사포 2발 동해로 추가발사…오늘 총5발(8/14, 연합뉴스)

- 북한은 14일 오후 300mm로 추정되는 신형 방사포 2발을 추가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합참은 "북한이 오후 12시56분과 1시5분 두 차례에 걸쳐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북방향 동해상으로 단거리 방사체 2발을 추가 발사했다"고 설명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남북 민간단체, 민족기록유산 공동전시회 협의(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통일부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민족기록유산 남북공동전시사업 관련 방북 신청을 11일 승인했다고 전함.
 - 신동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은 12일 오전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및 인민대학습당 관계자들을 만나 조선왕조실록 사대본을 비롯한 민족기록유산의 전시회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임.
- 北, 인천AG에 14개 종목 선수 150명 등 352명 참가 신청(8/15, 연합뉴스)
 - 김영수 2014 인천아시아게임조직위원장은 14일 "북한이 어제 저녁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통해 14개 종목 선수 150명을 포함해 총 352명의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음을 연합뉴스는 전함.
 - 뉴스는 종목별로는 축구가 남녀 총 38명으로 가장 많고 수영 16명, 양궁 8명, 육상 4명, 복싱 7명, 카누 2명, 체조 12명, 유도 10명, 공수도 5명, 조정 8명, 사격 9명, 탁구 10명, 역도 12명, 레슬링 9명이라 보도함.

- 한민구 국방부 장관 발언(8.7, '적도발시 단호히 즉각 응징')은 '긴장격화 소동으로 윤일병 타살사건의 여론 이목을 떠돌아보려는 발광'이라고 비난(8.13, 중앙통신·노동신문/허재비(*허수아비)의 새빠진 응징타령)
- 北 「조평통」 성명(8.14), '광복절(8.15)'을 계기로 "북남관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으려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남한의 '△미국 지배와 간섭 종료 용단, △既 남북합의들 이행 위한 실천적 조치, △남북간 적대행위 중지' 등 '對北정책 전환' 요구(8.14, 중앙통신)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北리수용 "핵억제력 보유, 美적대시정책 따른 결단"(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끊임없는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압력, 핵위협 공갈에 시달리다 못해 부득불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결단이었다"고 주장한 것을 보도함.
 - 수행중인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리 외무상이 10일 미얀마 네피도의 국제 컨벤션센터(M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핵보유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 우리의 핵은 말 그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수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전함.
 - 리 외무상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군대의 로켓 발사 훈련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조선 반도에서 어느 측의 군사훈련이 압도적으로 규모가 더 크고 위협적이고 더 횡수가 잦은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비난함.

- ARF서 북핵 입장차 확인…北, 핵실험카드 만지나(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 열린 ARF에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결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음을 전함.
 - 뉴스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으로 참가한 최명남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약식 기자회견에서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ARF 의장성명, 북핵·미사일 우려, 유엔결의 이행지지(8/11, 연합뉴스)
 - 미얀마 네피도에서 10일(현지시간)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 결과를 요약하는 의장성명에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우려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고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함.

- CTBTO 사무총장 "핵 관련 어떤 北실험도 탐지가능"(8/13,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시나 제르보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사무총장은 13일 "21세기에는 핵실험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우리가 함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밝힘.
 - 한국을 방문 중인 제르보 사무총장은 13일 외교부 청사에서 연합뉴스 등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수천 회에 달했던 핵실험은 21세기 들어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북한이 한 세 차례의 핵실험뿐이었다"고 말함.

- 北 "南은 美에 예속...자주권 유린당해"(8/13, 조선중앙통신)
 - 조국통일연구원은 13일 광복 69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비망록'에서 "남조선에서 해방 후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70년은 정치, 군사,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에 철저히 예속되어 정치적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당하여온 치욕의 역사"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비망록은 남한 정부를 자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정권'으로 규정하고 "현 집권자가 상전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 국회에서 뜨내기 영어로 연설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미·중 '균형외교'를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北 신문, UFG 연일 비난... "전쟁억제력 강화할 것"(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핵전쟁광신자들은 국제적인 규탄배격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러시아의 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미국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미국을 "핵전쟁을 몰아올 장본인"이라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의 핵선제 공격 위협을 항시적으로 받는 나라들이 자체의 방위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국제테러의 희생물,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라크, 리비아 사태가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주장함.

- 北 "'핵포기' 리비아, 美 지원 못받아...역사적 교훈"(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날로 악화되는 리비아 정세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 논평에서 리비아의 핵포기 사례를 들며 "사람들은 리비아 현실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찾고 있다"고 밝힘.
- 논평은 1969년부터 반미자주적인 정책을 고수하며 핵개발을 추진했던 리비아 정부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과 맞서다가 자신들도 이라크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해 핵 사찰단을 받아들이고 핵 관련 설비를 폐기했다고 주장함.

■ 北, 안보리 '美에 이중기준' 비난...中에도 불만 표출(8/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공정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활동의 기본원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안보리가 미국에 의해 휘둘리고 있다며 "이로부터 미국의 평화 파괴 행위를 짓부술 수 있는 힘이 그 어떤 국제기구나 대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밖에 없다는 결론이 스스로 나온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낸 유엔 안보리가 한미 군사훈련을 긴급 안전으로 다루자는 북한의 제의를 거부했다며 "안보리는 우리의 제의를 거부함으로써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미국의 눈치를 봐가며 줏대없이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지적함.

■ 北, 운병세 북핵공조 발언 비난... "핵무력 강화할 것"(8/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대결 미치광이의 구차스러운 비력질(구걸 행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운병세 역도가 외세와 야합해 반공화국 적대행위에 광분하는 저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아닌 보살(모른 척)을 하면서 도리어 우리를 걸고 위협이니 정면도전이니 하고 고아덴 것이야말로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
- 이어 "현 괴뢰집권세력은 외세와의 공조에 명줄을 걸면서 역대 그 어느 정권보다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국제공조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의 북침 핵전쟁 도발 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은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다. 회담 관련

■ 北, 리수용 외무상 회담 전하며 '中 빼고·日 넣고'(8/11일,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리수용 외무상은 9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캐나다 외무상과 브루나이 외무 및 무역상, 캄보디아 부수상 겸 외무 및 국제협조상, 몽골 대외관계상, 러시아 외무성 부상, 태국 외무성 상임비서를 각각 만나 쌍무관계 문제를 토의했다"고 밝힘.

- 통신은 "10일 외무상은 일본 외상을 만나 담화를 했다"며 리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을 만난 사실을 확인함.

■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北, 역내 긴장완화 방안 제시"(8/13, 연합뉴스)

- 북한이 인도네시아와의 외무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주변지역 긴장완화를 위한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고 마르티 나탈레가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밝힘.
- 뉴스에 따르면 질의응답에서 "동북아 안보구조를 볼 때 우리가 골몰해온 쟁점이 무엇인가? 핵확산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 군사훈련 문제다"라고 하며 북한의 제안이 6자회담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제안 내용이 훌륭하고 건설적이라면서 "북한이 제시했다는 사실 때문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흥미롭지만 그냥 목살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라. 대미국

■ 北, 올해 억류 미국인 2명 영사접촉 한두번씩 허용(8/15,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은 15일 미국 국무부를 인용해 북한이 억류 중인 미국인 밀리 매튜 토드(24) 씨가 지난 5월 9일과 6월 21일 두 차례 영사 접촉을 했으며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 씨는 6월 20일 한 차례 영사 접촉을 했다고 전함.

마. 대중국

- 특이사항 없음

바. 대일본

- 북일 외무상 13개월 만에 접촉…형식·내용 '베일'(8/11, 연합뉴스)
 - 11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미얀마 수도 네피도를 방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접촉했다고 전함.
 - 기시다 외무상은 "이 외무상과 인사하고 악수했다. 쌍방이 각자의 입장에 관해 발언했다"며 "특별조사위원회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관해 일본 측의 생각을 전달했다"고 밝힘.

- "리수용, 일본인납치 재조사내용 9월 초 전달 뜻 밝혀"(8/14, 교도통신)
 -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재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첫 보고 시기가 '9월 초가 될 것'이라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에게 밝힘.
 - 통신은 북일 당국이 보고 시기를 9월 둘째 주 이후로 조정하고 있었으나 둘째 주 전반에 조사 내용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北, 납치 재조사 대가로 日에 제재 추가해제 요구(8/15,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
 - 북한이 일본인 납치문제의 재조사 진행 상황을 다음 달 초 일본에 전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제재를 추가로 풀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니혼게이지(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15일 전함.

- 일본 '불법 무기운반' 北청천강호 실소유주 자산동결(8/15, 교도통신)
 - 15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기를 숨겨 운반하다 적발된 북한 청천강 호의 실소유주 원양해운관리회사(OMM, 본사 평양)를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의 결의에 기반을 둔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함.

- 北 사회단체, 광복절 맞아 日에 과거청산 촉구(8/15, 연합뉴스)
 - 북한 사회단체인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이하 대책위)는 광복 69주년인 15일 일본이 사죄와 배상을 통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함.

사. 대러시아

- 北 김정은-러시아 푸틴, 광복 69주년 축전 교환(8/13, 조선중앙통신)
 - 푸틴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광복 69주년을 기념한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우리는 귀국의 독립을 위하여 어깨를 견고 싸운 조선의 애국자들과 소련 군인들을 경건히 추억하고 있다"며 전쟁으로 생긴 친선과 협조의 전통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초가 됐다고 강조함.

- 北-러시아, 평양서 상호 노동자 파견 논의(8/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북한과 러시아가 '일방국가 영토 안에서 타방국가 국민들의 임시 노동활동에 관한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하는 공동실무그룹 제5차 회의를 열어 의정서에 조인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유엔 '北에 생사 확인 요구 한국인 납북자'는 34명"(8/13,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13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은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인 34명, 일본인 13명 등 강제납북자 47명의 생사확인과 27건의 실종사건에 대한 해명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밝힘.

자. 기타 국가

- 인니 조코위 당선인, 방북 초청에 긍정적 답변(8/13, 연합뉴스)
 -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3일 오후 자카르타주지사 집무실에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하고, 김정은 제1비서의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취임 뒤 북한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친서를 전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에 조코위는 접견을 마친 후 기자들에게 "(대통령) 취임 후 그곳(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말함.

- 앙골라 의사협회대표단(단장: 까를로스 알베르투 뵘투 데 소우사 위원장), 8월 11일 만수대언덕 김父子동상 참배(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단장: 김룡진), 8월 11일 귀국(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킹 메릭사 중국 방문...北역류 미국인 논의할 듯(8.12,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北 김정은, 인천AG 참가 女축구팀 연습경기 관람(8/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점검하기 위한 연습경기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대동하고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예정인 북한 여자축구 대표팀과 인민군 소속 4·25 팀의 '검열경기'를 지도했다고 전함.
- 北 김정은 "TV에서 날 봤다고? 재미없었겠구나"(8/12, 노동신문)
 - 노동신문 12일자는 '원아들의 웃음소리'라는 제목으로 실은 '정론'에서 평안남도 평성시의 고아 양육시설에 사는 5살 난 원아인 리명복 군이 지난 5월 평양 대성산종합병원에서 김 제1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이 "(방금) 뭘 하했느냐(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묻자 리 군은 "텔레비전을 보냈습니다(봤습니다)"라고 답하자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냈는가"라고 재차 물었고, 리 군은 "아버지 원수님(김정은)을 보냈습니다"라고 답한 것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재미없었겠구나"라고 말함.
- 北 김정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 건설장 시찰(8/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만족해하면서 올해 당 창건 기념일(10월 10일)까지 공사가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이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가 "우리 당의 과학중시, 인재중시 사상이 반영된 건축물"이라며 "머지않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하니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린다"고 말함.
- 北 김정은, 교황 방한일에 '전술로켓탄 시험발사' 직접 지휘(8/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조국해방 69돌을 맞으며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개발·완성된 초정밀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술로켓탄 시험발사가 진행됐다"며 김 제1위원장이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의 전술로켓 시험발사 지휘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박정천 부총참모장 겸 화력지휘국장, 홍영칠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와 국방과학연구소인 제2자연과학원 관계자들도 참가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리수용 외무상, 8월 10일 아세안지역 안보포럼에서 연설(8/12, 조선중앙통신)
 -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조선반도 정세가 차지하는 위치는 자못 중요하다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전함.
- 북한 리종무 前 체육상, 중장 계급 달고 軍 복귀(8/11, 연합뉴스·조선중앙TV)
 - 연합뉴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체육 열풍'을 주도해온 리종무 전 내각 체육상이 군(軍)으로 복귀한 것으로 보도함.
 - 조선중앙TV가 지난 4일 방영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라는 제목의 기록영화에서 리 전 체육상이 별

두 개의 중장 계급장을 단 군복을 입고 지난달 말 '전승절'(정전협정 체결 기념일·7월 27일) 기념 배구경기를 관람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바로 뒤에 서서 밀착 수행하는 모습을 전함.

- 北매체 "인천AG 참가 축구팀 연습경기 고위간부 관람"(8/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 겸열경기가 13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됐다"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훈 체육상과 평양 시민들이 경기를 관람했다고 밝힘.
- 北 리광근 前합영투자위원장, 대외경제성 부상에 임명(8/14, 연합뉴스 노동신문)
 - 연합뉴스는 14일 북한 리광근(61) 전 합영투자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출범한 내각 대외경제성의 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함.
 - 노동신문은 14일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전날 광복 69주년을 기념한 연회를 열었다며 "연회에는 전길수 철도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궁석웅 외무성 부상, 리광근 대외경제성 부상 등이 초대됐다"고 밝힘.
- 동남아 순방 北 리수용,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8/15, 조선중앙통신)
 -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국가를 순방 중인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4일 싱가포르에서 K. 산무감 싱가포르 외교장관과 회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회담에는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 싱가포르 외교부 상임비서와 동북아시아 총국장도 참석했으며, 통신은 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음.
 - 리 외무상은 15일 싱가포르 명예고위장관과 무역공업장관도 만남.

다. 공식 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 北 "인권보고서 곧 발표"...인권문제 적극 대응(8/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북한의 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창립(8.27) 22주년을 앞두고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앞날에" 이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 또 "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보장 정책'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함.

- 북한 민간단체, '제2차 위안부 기림일' 지지 성명(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따르면 북한 민간단체인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연대집회 참가자들에게 연대의 뜻을 보낸다"며 정대협 측에 연대 메시지를 보낸 것을 전함.
 - 북측 단체들은 "일본군의 성 노예 범죄를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영원히 아물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국가 범죄"라며 "하지만 일본은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에 대한 법적·도덕적 의무를 외면하고 오히려 침략 역사를 왜곡·부정하는가 하면 독도 영유권과 군국주의부활 등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기본건설을 함있게 다그치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중요한 요구(8/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김정일 저작(기본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하여, 2004.8.11) 발표 10돌 관련 '창조와 건설의 영재를 높이 모시어 조국 땅에는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다'며 '당의 주체적 건설사상과 이론, 건설정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감으로써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오자'고 독려함.

- 北 "광복은 김일성 업적"...'백두혁명혈통' 선전(8/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면 '세기를 이어 빛나는 역사의 8·15'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광복을 '사회주의 혁명의 시원'이라고 평가하고 이 혁명의 전통이 김정은 체제까지 계승되고 있다며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함.
 - 기사는 "모진 고생을 다 겪으시며 총대로 조국해방의 위업을 앞당긴 수령님(김일성)의 자욱자욱이 백두산의 줄기 마다에 새겨져있다"며 김 주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후대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 北, '선군질' 앞두고 김정은·김정일 軍활동 찬양(8/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선군영장의 손길은 통일강성국가의 미래를 펼친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이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다며 이를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선군영도의 결과"라고 주장함.
 - 또 1면의 사설에서는 군인과 학생 각계각층의 백두산 행군을 언급하고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굴함없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쌍운리로부터 다박술언덕에 이르기까지'라는 글을 통해선 김정일 위원장의 1960년 평안남도 속천군 쌍운리의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시찰과 1995년 1월1일 포병중대인 '다박술 초소' 방문을 찬양함.

- 9월5일상 전국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8월 11일 함경남도 함흥에서 진행하며 태종수(함경남도당 책임비서), 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개막연설) 등 참가(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선수팀, 2014년 아시아 14살 미만 축구선수권대회 결승경기 진출(8.12,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8월 13일 離任 주북 베트남 대사(레 광 바)와 담화(8.13, 중앙통신·중앙방송)
- 「총련」 사이디마현 상공회 대표단(단장: 황운해 회장), 8월 13일 평양 도착 및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참배(8.13,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北, 황해남도 수로공사 독려...“곡창지대 물문제 해결”(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황해남도 물길공사를 제기일에 무조건 끝내자'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공사를 독려함.
 - 신문은 황해남도의 자연흐름식 물길공사에 대해 "나라의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물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이라고 규정하고, "황남땅에서 세세년년 만풍년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면 결정적으로 물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예년에 보기 드문 가물(가뭄) 현상이 지속되는 올해의 이상기후현상은 황해남도 물길공사의 중요성과 절박성을 더욱 깊이 새겨지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천지유탄유공장 연일 선전...“과학화 본보기”(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조업 당시에 비해 제품의 수와 생산 능력은 각각 13배와 3.9배로 성장했고 기술역량은 2.5배 성장했다"며 "17년 만에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며 최첨단의 영마루에 우뚝 올라섰다"고 치켜세웠다고 소개함.
 - 이어 "일군들의 머릿속에는 원료와 첨가제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향과 대외시장 진출 등 승산이 확고한 방안들이 환히 그려져 있다"고 강조함.

- 北, 과학기술분야 젊은이 활약 잇달아 소개(8/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비약의 담보 - 생산과 기술의 일체화'라는 글에서 천지유탄유공장의 기술성공을 소개하며 대학 졸업생들을 칭찬함.
 - 신문은 "공장에서는 인재중시의 원칙에서 실력이 높은 젊은 대학졸업생들을 일정한 기간 현장경험을 축적하게 한 조건에서 기술 발전실에 배치하였다"며 대학 졸업생들이 내놓은 기술혁신안을 현장에 도입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함.

- 北, 나선특구 서비스업 체계적 육성 강조 눈길(8/17,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17일 입수한 북한 계간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5월 15일 발행)는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대 봉사계획화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나선특구에 최근 새로운 서비스업들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다며 서비스업의

체계화를 언급함.

- 확보는 나선특구의 활성화를 위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투자와 수익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의욕과 현 투자실태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함.

■ 북·중, 지안-만포 당일 관광코스 개통(8/17,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벌이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에서 출발하는 북한 자강도 만포시 당일 관광코스가 지난 11일 개통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7일 보도함.
- 이번에 시작된 중국인 대상 만포시 당일 관광은 1인당 요금이 770위안(약 13만 원)임.
- 지안-만포 당일 관광 개시에 따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당일 또는 이틀 관광코스로 정식 개방된 북한의 국경도시는 신의주시(~단동), 온성군(~투먼), 함경북도 회령시(~지린성 룡징<龍井>), 나선특별시(~지린성 훈춘<琿春>) 등 5곳으로 늘어남.

다. 경제 상황

■ 북한판 '시장경제'...당간부보다 노동자가 더 '부자'(8/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북수의 대북소식통이 "무산광산뿐 아니라 동광석을 중국에 수출하는 혜산광산 노동자들도 평균 북한돈 30~4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라며 "야근이 많고 생산실적이 높은 광부들은 최고 80만원까지 받기도 했다"고 전함.
- 김정은 체제가 야심하게 추진하는 기업의 독자경영체제 도입 '덕'이라는 게 북한 주민들의 일치한 전언이라고 소개함.

■ WFP "2분기 北 가구 87%, 영양부족 겪어"(8/13, 연합뉴스)

- 13일 세계식량계획(WFP)이 전날 발표한 2분기 북한 모니터링 및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WFP가 방문 조사한 141가구 중 47%는 심각한 영양부족을 겪었으며

- 40%의 가구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WFP는 올해 봄 가뭄이 식품 부족상황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방문 가구의 80%가 식량부족에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한다며 대부분 지인으로부터 식량을 얻거나 선호하는 음식보다는 값싼 음식을 선택한다고 전함.
 - “北 호텔, 외국인 인터넷 사용료 대폭 인하”(8/16, 미국의소리(VOA))
 - 북한 평양 시내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이 부담하는 유선 인터넷 사용료가 대폭 낮아졌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함.
 - VOA는 평양에 자주 드나드는 소식통을 인용해 평양 시내 호텔의 유선 인터넷 사용료가 2012년 중반만 해도 30분당 10달러였으나 올해 4월에는 5달러였다고 전함.
 - VOA는 평양 시내 호텔이 외신 기자가 아닌 일반 외국인에게도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으며 과거에는 고려호텔과 양각도호텔에서만 유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 들어 해방산호텔과 평양호텔도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덧붙임.

라. 대외 경제관계

- 美 NGO, 80만 달러 어치 의료지원품 北에 전달(8/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의 대북 의료지원단체 아메리케어스가 지난주 북한에 80만 달러(약 8억 2천만원) 상당의 의료지원품을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RFA에 의하면 아메리케어스 대변인은 북한 주민에게 제공할 의료지원품이 지난주 평양에 도착했다며 의료지원품은 평양, 황해북도, 평안도의 6개 병원과 진료소에 배분할 예정이라고 밝힘.
- “北, 짐바브웨 농경지 확보 추진”(8/16, 텔레스코프 뉴스)
 - 북한이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아프리카 남부 국가 짐바브웨의 대규모 농경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아프리카 매체 '텔레스코프 뉴스'가 16일 보도함.

- 이 매체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아시아 국가 외교관을 인용해 북한이 짐바브웨 '마쇼나랜드 이스트'와 '마쇼나랜드 센트럴' 지역에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지 확보에 나섰다고 전함.
- 북한이 짐바브웨 농경지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짐바브웨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비옥한 곳으로 꼽힐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기도 쉽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 농업과학원 농업나노기술연구소, 새로운 나노 빛 합성강화제 개발(8.11, 중앙통신)
- 《화원》상표를 단 '천연장수식품들(금강산국제관광특구개발총회사, 50여종)'의 '항암' 등 약효(금강산의 진귀한 약초·산나물 등) 및 금강산 관광객들 호평' 선전(8.16, 중앙통신)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北 주민에 무비자 입국 허용 42개국뿐"(8/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2일 국제법률회사 헨리앤드파트너스를 인용해 현재 북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 비자 발급을 받지 않은 채 단순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는 모두 42개국이라고 전함.
 - 북한 주민이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2010년 36개국에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작년보다 한 곳 늘었다고 RFA가 설명함.
- "'김정은 암살 영화' 개봉, 성탄절로 연기"(8/13, 미국의소리(VOA))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해 논란을 일으킨 미국 코미디 영화의 개봉이 오는 12월로 연기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보도함.
 - 배급사는 성탄 연휴가 미국인들이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성수기라고 강조하며 시사회 결과 '더 인터뷰'가 잘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라오스 국경 넘으려던 탈북자 11명, 中 쿤밍서 체포돼(8/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2일 중국-라오스 국경을 넘으려던 탈북자 11명이 12일 윈난(雲南)성 쿤밍(昆明) 지역에서 중국 변방부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12일 "탈북자 11명이 중국인 안내자가 운전하는 소형버스를 타고 이동하다가 오늘 아침 7시 50분(현지시간)께 라오스 국경 근처에서 중국 변방부대의 불심검문에 걸려 전원 체포, 쿤밍으로 이송됐다"고 전함.
- 북한 주민 2명, 강화 교동도로 헤엄쳐 귀순(8/14, 연합뉴스)
 - 북한 주민 2명이 14일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로 헤엄쳐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연합뉴스가 14일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정부 소식통은 14일 "오늘 새벽 4시께 50대와 20대 남성 2명이 교동도로 헤엄쳐 오는 것을 해병대 초병들이 발견했다"며 "이들은 '살려달라, 귀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힘.
- 북한 당국자, 중국서 탈북자 연행...중국 용인(8/15, 아사히(朝日)신문)
 - 아사히신문은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 당국자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중국에서 탈북자를 연행해 돌아간다고 복수의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함.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北, 억류 케네스 배 영사 면담 4개월 만에 허용(8/13, 미국의소리(VOA))
 -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의 영사 면담이

약 4개월 만에야 이뤄졌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3일 미국 국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함.

- "청천강호 등 제재대상 북한선박 중국항구 출입"(8/13, 산케이신문)
 - 13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OMM)가 지난달 2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후 관련 회사의 화물선이 중국의 항구에 드나든 것으로 파악됨.
 - 신문은 파나마에서 무기 밀매 혐의로 붙잡힌 청천강호, 청진2호 등 적어도 4척의 선박이 지난달 28일 이후 상하이(上海), 난통(南通), 타이창(太倉) 등 중국 내 8개 항구에 드나들었다고 전함.

마. 사회 동향

- 북한서 녹조류 스피룰리나 아이스크림 인기(8/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1일 평양유성식료공장은 스피룰리나를 배양해 이를 활용한 식료품을 만드는 공정을 갖추고 스피룰리나 아이스크림, 영양 사탕, 영양 암가루(물에 풀어 이유식 등 암죽으로 만드는 가루)를 개발했다고 보도함.
 - 조선신보는 이들 식료품이 "체력증강제, 피로제거제로서 인기가 높다"며 평양유성식료공장이 앞으로도 스피룰리나를 활용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것이라고 소개함.

- 北, 2014년 아시아 공개컴퓨터경기대회(대만)에서의 우수한 성적 소개(8.11, 중앙통신·중앙방송)
- 한반도 중주 고려인 자동차 랠리팀, 금강산 방문(8.13, 중앙통신)
- 16~28일까지 제2회 난징 하계청소년올림픽 참가(8.14,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및 6자회담

- ARF서 북핵 입장차 확인...北,핵실험카드 만지나(8/11, 연합뉴스)
 - 지난 1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북한의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결단"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다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함.
 -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 양상을 보인다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한 긴장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반면 북한이 UFG 이후에도 별 다른 도발을 보이지 않는 경우 북핵대화 재개를 위한 협의가 다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한미중 3국이 북핵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으나, 중국은 6자회담 개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비핵화 사전조치를 놓고 한미양국과 중국 간의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나. 미·북관계

- 케리 "北, 대결 택하면 더 큰 압력·제재 직면할 것(8/12,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와 함께 중동지역에서의 대 테러 공동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연례 호주·미국 장관급회담에 참석한 후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한 경고를 보냄.
 - 케리 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에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만약 대결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는 강력한 제재와 고립을 포함한 압력의 강도를 높일 준비 또한 되어있다"고 전함.
 - 북한이 핵보유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따른 결단"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이 북한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추이가 주목됨.

- '북핵' 진전없는 美정부서 北인권이슈 고개드나(8/15, 연합뉴스)
 - 13일(현지시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이례적으로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 문제를 꼭 짚어 언급하면서 즉각적인 폐쇄를 촉구한 것을 두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초점이 인권 쪽으로 이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올해 초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출간되었고 9월부터는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예정인데다, 북핵 문제에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의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겹쳐 미국이 새로운 대북압박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북한 인권을 전면으로 내세울 경우 현실적으로 대화의 가능성 자체가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인권을 지나치게 부각하기 보다는 경제제재 및 정보확산과 함께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큼.

다. 중·북관계

- 中에 서운했다...北, 원난성 지진 위로 아직 안 보내(8/10, 연합뉴스)
 - 북한은 지난 달 발생한 아프리카 기니의 콘서트장 압사사고,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 등에는 즉각 고위 간부들의 이름으로 해당국에 위로의 뜻을 전했으나, 지난 3일 발생하여 6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중국 원난성 지진에는 위로 전문을 보내지 않고 있음.
 - 북한이 이처럼 유독 중국을 향해서만 위로에 인색한 배경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것에 대한 북한 당국의 불편한 심기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中北, ARF서 공동관심사 깊이있게 논의"(8/11, 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0일, 자체 홈페이지에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 미얀마 네피도에서 양자회담을 개최

했다고 공개함.

- 올해 들어 양측 사이에 고위급 교류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북핵문제와 함께 소원해진 북중 관계의 복원 문제들을 주로 논의했을 것으로 전망됨.
- 리 외무상이 왕 부장과 정식 회담을 가진 것은 지난 4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측의 이번 만남은 북중 간에 정상적 교류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성격도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라. 일·북관계

■ 북일 외무상 13개월 만에 접촉...형식·내용 '베일'(8/11, 연합뉴스)

-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10일(현지시간) 오후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접촉했다고 밝혔으나, 어떤 형식으로 무슨 논의를 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음.
- 일본 언론은 기시다 외무상이 북한에게 납치문제 재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핵개발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으며, 북한은 북일 수교를 염두에 두고 과거 청산 등에 관해 의견을 제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일본 정부 측이 만남의 형식이나 논의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한국, 미국과 함께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남북자 문제를 두고 북한과 긴밀하게 대화하는 등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마. 기타

■ 차대통령 "추울 때 입춘시작, 남북관계도 좋은 기운"(8/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69주년 광복절 기념식에 앞서 여야 정당대표 등과 10분가량 진행한 환담에서 "날이 더운데 입추(立秋)가 됐다. 입춘도 날이 추울 때 온다"며 "남북관계도 어렵고 힘들지만, 추울 때 입춘이 시작되듯 좋은 기운이 이미 들어 있다고 본다"고 언급함.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은 분단과 대결의 타성에서 벗어나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협력을 위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되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 북측 대표단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개발 노하우와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및 노동력이 결합될 때 새로운 성장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 주민들의 삶의 진정한 융합을 위해 남북합동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전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美헤리티지 연구원 "韓, 전작권 전환 앞서 美MD 편입해야"(8/11, 연합뉴스)
 - 10일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한국은 전작권 전환논의의 초점을 전환의 시기가 아니라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포함해 필요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갖추는데 뒤야 한다"고 밝힘.
 - 특히 그는 "한국이 현 KAMD 체제를 미국이 주도하는 포괄적인 동맹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통합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와 해상기반의 탄도미사일 요격체제인 SM-6를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그는 "전작권 전환에 따라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명분과 목적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한 한국 내에서 독자적 핵무기 개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역내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 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 케리 美 국무, 8·15 광복절 경축 성명 발표(8/14,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한국의 독립기념일(The Republic of Korea's Independence)' 성명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민을

대표해 광복절을 맞는 한국 국민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낸다"고 밝힘.

- 케리 장관은 "미국과 한국은 공통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둔 오랜 우정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양국 간 협력은 정치·경제·군사 부문은 물론이고 양국 국민의 유대에 걸쳐 넓게 펼쳐져 있다"고 전하면서 "미래에도 지속적이고 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나. 한·중 관계

- 한중 FTA 잇단 긍정신호..막후에선 '고지 쟁탈전'(8/13,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판세가 양국 외교 채널에서는 연내타결을 긍정하는 신호가 잇따르는 반면 통상 실무진간에는 치열한 협상전이 격화되고 있음.
 - 지난 8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회담을 가진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FTA 협상이 연내에 타결되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고,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FTA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반면 '연내 타결' 이라는 다급한 일정표를 받아든 협상 실무진들은 다음 달 제 13차 협상을 앞두고 협상의 최대 쟁점인 공산품·농산물 개방 문제와 서비스시장 개방 수위 등을 놓고 협상에서 논의할 대상에 관한 이견 조율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짐.

다. 한·일 관계

- 한일교역 갈수록 위축...국제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8/13, 연합뉴스)
 - 1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일 교역액(수출액+수입액)은 429억7천3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9.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엔화약세 현상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와 수입처 다변화로 인한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감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한국의 전체 수출입 시장에서 일본의 비중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대일 무역적자 규모 역시 2010년 361억2천만 달러에서 2013년 253억6천70만

달러로 축소됐고,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는 105억9천10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의 134억5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어듬.

- 명진호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환율과 경기 부진, 교역 다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 비중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 같다"고 분석함.

■ 정부 "아베 야스쿠니 공물료봉납, 일부각료 참배 개탄"(8/15, 연합뉴스)

- 정부는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료를 납부하고 일부 내각 각료와 국회의원 등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함.
- 또한 정부는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양국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을 (일본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는 아베 총리가 지난해 8월 15일과 마찬가지로 직접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고 공물료를 납부한 것을 고려하여 지난해와 같이 대변인 논평이라는 대응 수위를 유지하면서도 과거사 현안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일본 정부에 계속 촉구해 나갈 것으로 알려짐.

■ 차대통령 "日지도자 올바른 역사인식 지속 촉구"(8/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광복절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행사를 하고 "내년이면 광복 70주년을 맞게 되는데 한일관계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또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가 한일관계를 건설하게 발전시키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후손들에게 떳떳할 수 있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 한편 복수의 일본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일본에 촉구한 것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음.

- "한일 정상, 관계개선 리더십 보여야" <日신문>(8/16, 연합뉴스)
 - 아사히 신문은 16일자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며 일본 정치 지도자의 '지혜와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한데 대해 "일본의 성실한 대응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도 지혜와 결단으로 발을 내딛기 바란다"고 적음.
 - 마이니치 신문은 사설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양국 사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戰時) 여성의 인권'이라는 넓은 시야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한국에도 지나친 대일 비판을 자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자세를 보여주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전함.
 - 요미우리 신문 사설은 "양국의 정치 지도자가 대화를 거듭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일한 쌍방이 서로 양보하는 형태로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논평함.

라. 한·러 관계

- 러~한반도 고려인 랠리, 오늘 휴전선 넘어 남으로(8/16, 연합뉴스)
 - '고려인 이주 150주년'을 맞아 지난 달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유라시아 평화와 남북 화해의 가치를 내걸고 러시아~한반도 랠리 대장정에 나선 고려인 동포들이 16일 북쪽에서 휴전선을 넘어 남으로 들어올 예정임.
 - 동포들로 구성된 자동차 랠리팀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한반도를 관통하는 것은 '분단 6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며, 이들은 세월호 참사 정부합동분향소 방문, 재외동포재단 주최 만찬 참석, 프랑치스코 교황 집전 미사 참석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19일 '서울~부산 국민랠리'에 나섬.

마. 미·중 관계

- 중국 "범죄인 인도조약 조속히 체결하자" 美에 촉구(8/11, 연합뉴스)
 - 중국 공안당국은 11일 미국이 해외로 도피한 중국인 범죄자의 주요 근거지가 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을 조속히 체결하자고 촉구함.
 - 중국 공안부 국제협력국 라오진룽 국장은 이날 "150명 이상의 해외도피

경제사범 중 상당수가 미국에 있다"며 "미국으로 도주한 범죄인을 중국으로 데려오는 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다"고 전함.

-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미국 사법당국이 중국 사법 시스템을 불신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전해 조약 체결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됨.

■ "킹 특사 중국 방문...北역류 미국인 논의할 듯"(8/12,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2일,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중국 고위관리들과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1일(현지시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함.
- RFA는 킹 특사의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케니스 배, 매튜 토드 밀러,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과 북중 접경지역에서 기독교 관련 활동을 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붙잡힌 한국계 미국인 피터 한씨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중국 신형 ICBM 동평-41, 미국 위협하나(8/12,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는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안보전문가들이 중국이 신형 ICBM '동평(東風)-41'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미사일 방공망을 뚫고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함.
- 동평-41은 차량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되는 미사일로 약 1만 4천km의 최대 사거리에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중경제안보점검위원회의 래리 워첼 연구원은 동평-41의 뛰어난 기동력과 속도를 근거로 미국에 핵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함.
- 또한 미국 켄터키대학의 로버트 파리 조교수는 중국이 핵 공격을 당한 후에도 핵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갖춘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한 반면 미국의 중국군사문제전문가인 린창성은 육·해·공 3위 일체로 이루어진 미국의 핵전력과 중국의 핵전력은 수준차가 현격하다고 평가함.

■ 중국, 오바마 '무임승차론'에 "미국은 침략자" 발끈(8/13, 연합뉴스)

-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3일, 사설 격인 '종성(鐘聲)'에서 최근 오바마

- 대통령이 중국이 세계분쟁 해결 과정에서 '무임승차'해왔다고 비판한 데 대해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킨 '침략자'"라며 강하게 되받아침.
-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과의 회견에서 "중국은 지난 30년간 (세계분쟁해결에) 무임승차했다"고 말하며 또 "중국은 초강대국이지만 분쟁에 개입할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없다"고 전함.
 - 이에 인민일보는 "미국은 일방주의적 몽둥이를 휘두르며 무지막지하게 이라크 정권을 전복하는 전쟁을 일으켰고 이후 이라크는 11년간 난국에 빠져들었다"며 "미국은 '침략자', '포기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중국은 '협력자', '건설자'라는 평화적 역할을 맡아왔다"고 강조함.

■ 케리 "對中관계 개선, 아태 안보·안정에 중요"(8/14,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동서문화 연구센터에서 미국과 중국 간 협력 확대가 아시아·태평양의 안정과 안보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중국에 대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과의 영토분쟁 해결을 모색할 것을 간접적으로 촉구함.
- 또 케리 장관은 "미국은 평화롭고 번창하는, 안정된 중국의 부상을 환영한다"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을 염두에 둔 듯 "미국은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협박과 강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함.
- 케리 장관은 이어 이란 핵문제와 북한 비핵화와 같은 일부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 간 현재의 협력에 만족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과 벌채 등을 줄이기 위한 양국 간 노력을 환영한다고 전함.

바. 미·일 관계

■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우주감시 공조 포함"(8/16, 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연내에 마련하기로 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안에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에 충돌할 위험을 탐지했을 때 미국 측에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을 상정한 협력 방침을 담은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산케이신문이

16일 보도함.

- 일본 방위성은 우주 쓰레기 감시활동 등을 벌일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를 5년 후 발족시키기로 하고 이러한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군사, 비군사 분야의 우주 개발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사. 중·일 관계

- "중국해경선 '日패전일' 센카쿠 주변 순찰"(8/16, 연합뉴스)
 -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6일 일본 언론을 인용, "중국 해경선이 센카쿠 12해리 바깥 해역에서 15일까지 7일 연속 순찰활동을 벌였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순찰 활동이 전개되었는지는 공개하지는 않음.
 - 중국 해경은 이달 들어 6일과 12일 두 차례 센카쿠 영해(12해리 이내 해역) 안에서 순찰활동을 전개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중국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항일전쟁 승리기념일'(9월 3일)을 앞두고 대일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센카쿠 해역에서의 중국과 일본 양국 간 마찰이 예상됨.
- 美외교가, 11월 中日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주목(8/16, 연합뉴스)
 -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총리가 신사참배 대신 공물료를 보낸 것에 대해 "아베 총리의 행위는 중국과 더 큰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도 전문가들의 분석을 토대로 아베 총리의 신사참배 자체는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 WP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으며, 워싱턴 외교소식통들도 11월 APEC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의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량 운상 베이징대 국제학과 교수 역시 성조지에 "아베 총리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중일 정상회담 전망을 높일 것"이라며 "최근 중일 관계는 개선의 모멘텀을 맞고 있다"고 전함.

아. 중·러 관계

- 中, 러 접경에 대규모 과일·채소 도매시장 건설 추진(8/11, 연합뉴스)
 - 인테르팍스 통신은 11일(현지시간), 중국 헤이룽장성의 중국 기업 '바오준'이 러시아 연해주 하산군과 접경한 동녕현에 약 7만km² 면적의 과일·채소 도매 시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 부지에는 일반창고와 냉동창고 등의 유통시설과 수출절차 간소화를 위한 세관도 함께 건설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중국 측의 이러한 계획은 러시아가 최근 취한 대(對) 서방 농산물·식품 금수조치로 제재 대상 품목의 러시아 시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러시아의 대 서방 금수조치가 중국 농산물 기업에 이익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바오준사는 이 사업에 약 6천만 위안(약 10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또 다른 농산물 기업인 딜리그룹에 따르면 올해 대러 수출이 지난해보다 80% 증가하면서 수출액은 30억 위안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러-中, 이달 말 연례 對테러 합동훈련(8/11, 연합뉴스)
 - 러시아군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러시아는 24~29일까지 중국 네이멍구 자치구 주무허 훈련기지에서 실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의 합동 군사훈련인 '평화사명-2014'에 약 100여 단위의 장비와 900여명의 병력의 규모로 참여한다고 밝힘.
 - '평화사명' 훈련은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안보·경제 협력체인 SCO 주도의 연례 대테러 훈련으로, 테러리즘·분리주의·극단주의 등에 대한 대처를 훈련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올해 훈련에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SCO 회원국 병력 7천명이 참가할 예정임.

자. 일·러 관계

- 아베, 러 쿠릴열도 훈련에 "도저히 용납못해"(8/13, 연합뉴스)
 - 러시아군이 12일 실효지배중인 쿠릴열도에 배치된 군부대 병력과 공수부대 요원 등 병력 약 1천 명과 100여대의 군 장비, 태평양함대 전력 등을 동원하여 훈련을 시작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고 13일 교도통신은 보도함.

- 아베 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한 쿠릴열도 반환을 성사시키기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으나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 사건 이후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에 보조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음.
- 쿠릴열도 영유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은 일본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하여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하면서 중단된 상태이며, 이번 러시아군의 훈련 역시 일본의 대 러시아 제재 참여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차. 기타

- **朴대통령 제안한 한중일 중심 '원자력안전협의체'는(8/15,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북아는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이다. 원자력 안전문제가 지역주민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한국·중국·일본을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협의체' 구성을 제안함.
 - 이 구상안은 2008년부터 한중일 3국이 매년 순회개최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을 확대, 발전시켜 협의체 구성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정부의 구상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짐.
 - 정부는 TRM을 활용해 1차 '동북아 원자력 안전 심포지엄(TRM+)'을 다음 달 일본에서 열리는 제7차 TRM과 연계해 개최하고 2차 TRM+는 오는 11월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TRM을 발전시켜 간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힘.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北, '윤 일병 사건' 대남공세 활용... "군부판 세월호 사건"(8/11, 헤럴드경제)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날로 확대되는 군부판 세월호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일병 사건을 타살사건으로 규정한 뒤, "그에 대한 구타와 각종 가혹행위가 모두 의식적인 것이며 살인을 전제로 한 치 떨리는 만행이었다"고 보도했음.
 - 신문은 "윤 일병 타살사건이야말로 미국의 침략전쟁 대포밥인 괴뢰군의 취약성과 남조선의 부패한 정치, 병든사회가 낳은 필연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진상조사, 일벌백계를 거론하면서도 "윤 일병 타살사건에 책임이 있는 괴뢰군상층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음.
 - 노동신문은 같은 날 '청와대의 도마뱀 꼬리자르기'라는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문책하지 않고 권오성 전 육군참모총장만 사퇴시키는 것을 문제 삼았음.
- 北 "인권보고서 곧 발표"...인권문제 적극 대응(8/11,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의 인권문제 연구기관인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창립(8.27) 22주년을 앞두고 인권보고서를 준비 중이라며 "가까운 앞날에" 인권문제에 대한 외부의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인권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중앙통신은 인권보고서의 발표가 "인권옹호의 간판 밑에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허물어보려고 날뛰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 단죄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또 "공화국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인권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보장 정책'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유 실상'이 담길 것이라고 소개했음.

- 북, 원산관광도시 만들려 주민 강제이주(8/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강원도 원산시 일대를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빈 주택 철거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음.
 - 북한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고 돌아왔다는 중국의 한 대북사업가는 "원산은 지금 관광도시 건설에 앞선 주민들의 강제이주 사업 때문에 온통 난리가 났다"고 설명하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공장, 기업소 등도 폐쇄·이전되고 있으나, 어디로 이전 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 원산주민 강제이주사업은 북한당국이 금년 6월 12일에 "원산과 금강산을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특구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치한다"고 발표한 이후 본격 추진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중국에 나온 북한 소식통들은 "이주대상 주민들의 새로운 주택 마련과 일자리 등에 대한 중앙의 대책은 별로 알려진 게 없고 철거되는 가구의 가장이 소속된 단위나 이주지역의 행정 책임자들에게 대책마련을 떠넘기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음.

- 북 불법전화 사용주민들 수용소행(8/12,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불법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함경북도 국경연선 지역에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고 소식통들이 언급함.
 - 함경북도 국경연선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국가보위부 검열대가 최근 평안북도로 이동했다고 복수의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음.
 - 불법휴대전화와 불법영상물, 마약, 도박 단속을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보위부 검열대는 올해 2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양강도에 대한 검열을 마치고 5월 초부터는 함경북도 국경연선 지역 검열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검열대가 불법휴대전화 사용자와 마약사범들만 처벌하는 데 그쳤는데, 마약 유통업자에게는 징역 2년, 상습적 마약사용 혐의자들에게는 노동단련형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전함.
 - 반면 중국 기지국을 이용한 불법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처벌이 내려져 이번 국가보위부 검열의 진짜 목적이 불법휴대전화 척결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소식통은 강조했다.
 - 한편 또 다른 함경북도의 소식통도 "이번 검열에서 적발된 불법전화 사용자들은

이례적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고 처벌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주장했다.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6월 중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오산덕동 주민 김은실(36살)과 철석이 아버지로 알려진 남문동 주민 강모씨(39살) 씨가 종신형을 받고 화성 '16호 관리소'에 보내졌다고 말했다.
- 같은 시기 함경북도 온성군에서도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2명의 주민이, 그리고 8월 초에는 새별군에서 불법휴대전화를 사용하던 한 가족 3명이 '16호 관리소'로 보내졌다고 덧붙였다.

■ WFP '북한 가구 87%, 영양 부족 겪어'(8/13, 미국의 소리)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12일 발표한 2분기(4월~6월) 북한사업 평가보고서에서 북한 내 140개 가구를 직접 방문조사한 결과 87%인 121개 가구가 식량 부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 가구의 81%가 영양 부족을 겪었고, 올 1월에서 3월 방문 가구의 79%가 영양 부족을 겪었던 것에 비하면 식량 사정이 더 나빠진 것임.
- 세계식량계획은 올 초봄 가뭄이 식량 상황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고 밝혔으며, 방문 가구들은 모두 하루 세 끼를 먹었으나 이 중 39%는 세계식량계획 요원들이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고기나 생선, 달걀, 콩 같은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못했다고 지적함.
- 단백질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는 비율이 지난 3분기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세계식량계획이 올 2분기 방문한 가구들에서 고기나 콩을 섭취한 기간은 주당 평균 1.1일에 불과했다고 함.
- 또 방문 가구의 80%가 식량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친구나 친지들로부터 식량을 얻고 있고 값싼 음식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있다는 응답도 많았음.

■ 김정은, 육아원 등 건설현장 방문...親인민적 행보?(8/13,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13일 김정은이 완공을 앞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 건설 현장과 평양육아원, 애육원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보도함.
- 신문은 김정은이 고아 양육시설인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 현장을 시찰하고,

"앞으로 각 도들에서 평양육아원·애육원과 같은 보육시설을 꾸려주어 부모없는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무럭무럭 크도록 하게 하자는 것이 당중앙의 의도"라고 말했다고 전함.

- 또한 "명당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평양육아원·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과 미래사랑,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힘 있게 과시할 수 있게 잘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고 소개했음.

■ 북, 4개월 만에 억류 케네스 배 면담 허용(8/13,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마리 하프 부대변인은 13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지난 11일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한국명 배준호) 씨에 대한 영사 접근이 그가 수감된 노동수용소에서 이뤄졌다고 밝힘.
- 하프 부대변인은 국무부가 이에 대해 배 씨 가족에게 알렸다면 그의 건강 상황에 대한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덧붙임.

■ 북 내륙지역 식량사정 악화(8/14,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내륙지역 주민들이 국경연선 장마당들에 몰려와 식량을 대량으로 구입하면서 국경연선의 장마당들에서 식량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지난해 생산된 식량이 바닥나면서 북한 내부, 특히 황해남북도, 강원도 등 내륙지역의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복수의 현지소식통들이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역별로 식량단속을 강화할 데 대한 도 보안국 명의의 지시문이 8월 6일에 내려왔다"며 "최근 '앞지대(내륙지대)'로 식량이 많이 빠져나가는 사정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전함.
- 함경북도 보안국의 지시에 따라 각 시, 군을 연결하는 도로와 역전들에 보안부 검열대가 나와 쌀 장사꾼들을 모두 단속하고 있음.
- 소식통은 8월 초부터 앞지대 장사꾼들이 회령, 무산, 새별 일대에 몰려들어 식량을 대대적으로 거두어 가고 있다고 말했음.
- 양강도의 한 소식통도 "국경지역은 어떻게든 중국을 통해 식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지대' 보다는 식량사정이 많이 나은 편"이라면서 "그러나 '앞지대'의 식량사정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앞지대'의 경우 햇곡식이 지나고 가을걷이가 한 달 정도 남은 8월이 가장 급한 시기지만, 남새(채소)도 많이 나고 산나물도 있기 때문에 식량난이

주민들의 아사사태로 이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앞지대'의 올해 농사작황은 지난해 보다 좋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주장했음.

■ 북 억류 파울 씨, 단 한 차례 영사접촉(8/14,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는 14일 북한에 억류된 미국 오하이오 주 출신 관광객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 씨가 지난 6월 20일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과 영사 접촉을 가졌다고 밝힘.

-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해외에 있는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미국인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북한 당국이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스웨덴 대사관과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에 억류된 세 명의 미국인과의 영사 접촉을 규칙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기독교인 억류하면서 외부엔 '교회 단장' 선전(8/14, 미국의 소리)

- 북한 정부가 미국인 기독교인들을 장기간 억류하고 있으면서도 평양의 교회를 재단장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에 대해 이중잣대를 계속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29일 칠골교회의 개건 소식을 전하며 신앙의 자유를 강조했다.

- 하지만 전문가들은 기독교에 대한 북한 정부의 주장은 실상과 크게 다르다고 지적하는데, 통일연구원의 올해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건국 이래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란 김일성 주석의 교시에 따라 지속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음.

-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지난 3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종교 탄압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함.

- 영국의 데이비드 엘튼 영국 상원의원은 북한 당국은 기독교에 대한 탄압과 선동을 멈추고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이 이번에 개건한 칠골교회가 증조할머니인 강반석이 다니던 곳임을 직시하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탄압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북한 주민 2명, 강화 교동도로 해엄쳐 한국 망명(8/14, 미국의 소리)
 - 50대와 20대로 부자지간인 북한 남성 2명이 14일 새벽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로 해엄쳐 넘어와 한국으로 망명 의사를 밝혔음.
 - 한국 정부 관계기관은 해병대로부터 이들의 신병을 인계 받아 망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음.

- 영, 북 인권·민주화 프로그램 개발 토론(8/15, 자유아시아방송)
 - 영국 외무성은 지난 13일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음.
 - 회의에는 세계기독교연대, 오픈도어스, 릴리스 인터내셔널과 탈북자 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등 영국 내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초청됨.
 - 이번 회의는 이들 단체가 영국 외무성의 인권과 민주화 프로그램(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gramme) 기금을 지원받아 북한의 민주화와 주민의 인권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설명회 성격을 띤 행사였음.
 - 이 프로그램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행사나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 등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음.

- "평양 호텔들, 외국인 인터넷 사용료 크게 낮춰"(8/15, 미국의 소리)
 - 평양의 일부 호텔이 외국인들에게 제공하는 유선 인터넷 사용료가 대폭 인하되었는데, 마음껏 이용하기에는 부담스런 금액이지만 2년 사이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함.
 - 외국인들이 북한 호텔 객실에서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경우, 주로 외신기자들에게 사용을 허가하는데 비싼 요금 걱정에 이메일 정도만 확인하고 급히 접속을 중단한다고 함.
 - 하지만 최근 인터넷 사용료가 크게 떨어지고, 접속이 가능한 호텔도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내부 취재를 위해 1년에 수차례 평양을 방문하는 한 소식통은 지난 2012년 중반에만 해도 30분 당 7.5유로, 미화 10달러로 책정돼 있던 인터넷 사용료가 올해 4월 방북 당시 5달러로 하락했다고 전함.
 - 북한 내부의 한 소식통도 현재 고려호텔의 인터넷 사용료가 30분 당 4유로, 5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확인했으며, 외신기자들 뿐 아니라 일반 외국인

투숙객들에게도 인터넷 사용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함.

- 한편 과거 평양의 고려호텔과 양각도호텔에서만 제공하던 유선 인터넷 서비스를 올해 들어 해방산호텔, 평양호텔 등으로 확대함.

■ 北 조평통 "윤 일병 사건 주범 김관진 처벌해야"(8/16, 연합뉴스)

- 북한 조평통은 16일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치사 사건의 '주범'으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목하고 처벌을 촉구했음.
-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에서 "남조선의 각 계층은 괴뢰군 내 폭행살인 만행의 주범인 김관진 놈을 민심의 이름으로 단단히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 김 실장이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동족대결'을 위해 군에 '야만적인 기합과 폭행'을 조장했다며 비난하며 2011년 이후 각종 군 내 사고도 이때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청와대가 지금과 같이 김관진 역도를 그냥 끼고 돈다면 자기의 얼굴에 계속 떡칠을 하게 될 것은 물론 괴뢰군 내에서의 참혹한 인권유린 만행도 날로 비호·조장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음.

2. 북한 인권

■ 美의회 '北인권' 압박...상원 '정치범수용소 실태파악' 발의(8/12, 연합뉴스)

- 1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정보위원장 명의로 국가정보국(DNI)으로 하여금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정보수권법안(S. 2741)을 발의했음.
- 법안은 상원 정보위 차원의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된 것으로, 내달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임.
- 정치범 수용소 실태 파악 관련 내용은 공화당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에 속한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적극 발의했으며 정보위 심의과정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음.
- 법안은 우선 인권위반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의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음.

- 또한 각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해 ▲수감자 규모 ▲지리적 위치 ▲수감 사유 ▲각 수용소에서 생산한 제품과 주요산업, 최종 소비자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과정에 개입한 제3국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정보 ▲수용소 운영을 책임진 북한의 모든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정보 등을 담아 보고하도록 했음.
- 수용자들의 식량 사정, 주거, 의료, 근로조건 등도 상세히 보고하도록 했음.
- 이는 올해 초 미국 상·하원이 내년도 연방정부 세출법안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을 포함시킨 것과 맞물려 주목되는데, 해당 법안은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DRL)국이 민주주의 기금 명목으로 북한의 교도소와 수용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음.

■ **靑 '국가안보전략' 제시…남북관계 개선의지 명문화(8/13, 연합뉴스)**

-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희망의 새 시대, 국가안보전략' 정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국방, 통일, 외교 분야 정책을 통합해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가안보 전략'을 제시했음.
- 청와대는 ▲튼튼한 안보태세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 ▲신뢰외교 전개를 국가안보전략의 3대 기조로 설정했음.
- 청와대는 남북교류 및 북한인권 분야에서는 ▲이산가족의 정례적인 상봉과 전면 생사확인, 영상편지 교환 및 유전자 정보 보관사업 추진 ▲국군포로 및 납북자 생사확인, 가족상봉 및 송환 추진 ▲북한 인권법 제정 등을 제시했음.
- 또 박 대통령이 드레스덴 구상에서 밝힌 민생 인프라 지원에 대해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했는데, "농업, 축산,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사업과 조림 및 산림병충해 방제 등 산림녹화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지원이 성공하면 신재생 에너지, 생태보전 등으로 협력을 확대해 '그린데탕트' 사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임.

■ **케리 국무장관 "북한 강제수용소 당장 폐쇄돼야"(8/14, 미국의 소리)**

-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하와이대학 동서문화연구센터(East-West Center)에서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강제수용소 폐쇄를 촉구했음.
-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인권 최종 보고서에

대한 지지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북한의 노동수용소와 처형 등의 실태를 "전적으로 기피한 잔인함"으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음.

- 美 "케리 '수용소 폐쇄' 발언은 北 변화 압박 의도"(8/15,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하와이에서 '북한의 강제수용소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음.
 -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을 우려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케리 장관의 이번 발언은 추가적인 무게를 실어준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압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했음.

3. 탈북자

- 탈북 6개월만에 재입북 시도한 50대 여성 의사(8/12, 중도일보)
 - 북한에서 의사로 재직하다가 탈북 후 입국한 50대 여성이 탈북 6개월여 만에 재입북을 시도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 주모(57) 씨는 중국을 방문했다가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탈북자 대열에 합류했지만, 가족이 그리워 함께 탈북한 A씨와 함께 막노동에서부터 카드론 대출까지 받으며 재입북을 준비함.
 - 그러나 감시망에 포착돼 검찰은 '북한으로 탈출을 시도한 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국가보안법 (잠입·탈출, 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주 씨를 기소했음.
 - 주 씨 측은 "오로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재입북을 시도한 것으로, 국가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없어 탈출 예비·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1심 법원은 "하나원 등에서의 교육과정과 남한 정착과정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점과 북한으로의 탈출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잠입·탈출 혐의는 인정했음.

- 다만, 김일성 배지와 북한 인공기, 찬양 메모 등의 제작, 소지, 반포 혐의(찬양·고무)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음.
-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는 12일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은데다, 북한에 있는 외동딸과 최근 출생한 손녀를 만나기 위해 재입북을 결심한 점' 등을 참작한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음.

■ 라오스-中 국경서 탈북자 11명 붙잡혀…대대적인 단속(8/12, MBC)

- 라오스와 중국의 접경지, 모한 국경 검문소에서 어린이를 포함한 탈북자 11명이 중국 변방부대에 검거됨.
- 중국을 거쳐 라오스로 가려다 마약단속 검문소에서 발각된 것으로, 붙잡힌 이들은 4살 어린이 등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대북 지원단체 관계자는 설명했다.
- 11일 오전에도 8살 난 어린이가 포함된 탈북자 가족 등 11명이 붙잡혀 중국 길림성 도문시의 탈북자 수용소로 이송됐으며, 사흘 전에는 탈북자 세 가족, 18명이 중국 장춘 등지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한 상태임.
- 중국 당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검거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베이징에 연수 중이던 피바다 가극단 소속 피아니스트가 지난 6월에 미국으로 망명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해 탈북민들의 소재를 파악하면서 중국 당국에 강제로 북송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음.

■ 中서 체포된 탈북자 20여명 北送…“추가 단속 움직임”(8/12, 데일리NK)

- 지난달 중국 산둥성 칭다오와 윈난성 쿤밍 등지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과 인접한 지린성 투먼 국경경비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 20여 명이 이달 초 강제 북송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 대북 소식통은 "이달 초 투먼으로 들어온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이미 송환됐다"면서 "보통 일주일 정도 있다가 송환되는 기존의 절차에 따라 북으로 보내졌다"고 전했다.
- 체포된 탈북자는 60대 부부를 비롯한 네 가족과 20대 청년 및 들을 갖 넘긴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특히 이들 외에 탈북을 도왔던 가이드 6, 7명도 함께 체포됐는데, 가이드 중에는 이미 탈북에 성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있어 이들은 "중국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북송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또한 소식통은 지난 6월 중국 옌지(延吉) 등에서 붙잡힌 탈북자 11명도 7월 말 북송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소식통은 최근 중국에서 탈북자 추가 체포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공안이 최근 탈북한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내 외곽에서도 벗어난 지역에서 오래 살던 탈북자까지 체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이어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 당국에서 (탈북자 체포는) 일괄적으로 내린 지시라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탈북자 체포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나중에 (탈북자 문제가) 큰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북한 당국자, 중국서 탈북자 연행...중국 용인"(8/15,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의 용인하에 중국으로 당국자를 보내 탈북자를 붙잡아가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5일 보도했음.
- 신문은 국가안전보위부 등 북한 당국자가 독자적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중국에서 탈북자를 연행해 돌아간다고 북수의 중국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 아사히는 북한 당국자가 중국의 허락을 받아 짧게는 하루 길게는 수일간 중국에 머물며 탈북자를 붙잡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 측으로부터 차량까지 제공받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과 북한이 수사에 관해 협력하는 조약을 맺고 있으나 쌍방의 영토에서 상대가 수사·체포할 권리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 당국자의 탈북자 체포를 인정하는 것은 탈북자 송환을 둘러싸고 중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것과 관련 있다고 신문은 분석했음.

4. 이산가족

- 남북 고위급접촉 19일 판문점 개최 北에 제의(8/11, 연합뉴스)
 - 통일부는 11일 오전 김규현(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수석대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북한에 제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전격 제의함.
 - 정부는 회담일자를 제시했으나, 북측에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회담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으로 할 것을 제의했음.
 - 정부는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의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특정 의제는 안 된다고 배제하지 않는다"며 "북측이 그런 의제를 제기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힘.
 - 통일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합의 후 예전에는 최소 두 달 정도 소요됐는데 압축해서 하면 한 달에서 6주 정도면 가능하다"고 말함.
- 野 "5·24 철회·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해야"(8/12, 연합뉴스)
 -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는 12일 제6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4대 제안'을 발표했다.
 - 위원회는 4대 제안에서 올해 추석을 맞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고 정례화에 합의해야 하며 금강산 관광 재개도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음.

5. 납북자

- 유엔 '북한에 생사 확인 요구한 한국인 납북자 34명'(8/12, 미국의 소리)
 -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생사 확인을 요구한 강제 납북자 47명 가운데 한국인은 34명, 13명은 일본인 납북자로 나타났음.
 - 34명의 한국인 납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은 서해와 남해에서 어선을 타고 고기를 잡던 어부였으며,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 끌려간 사람 7명, 1969년

KAL기 공중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황원 씨 등 3명, 1977년 전남 홍도에서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납치된 이민교 씨와 최승민 씨 등 2명이 뒤를 이었음.

- 연도별로 보면 한국전쟁 때 납북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1960년대와 70년대에 북한에 납치됐음.
- 또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13명에 대해서도 북한에 생사 확인을 요구함.
- 그러나 북한은 실무그룹에 보낸 해명서에서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거나 납북 주장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산물이라고 반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제헌의원 등 282명 6·25 납북자로 추가 결정(8/13, 연합뉴스)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14차 회의에서 만근 제헌국회의원과 김상목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등을 포함해 282명을 납북자로 추가 결정함.
- 이로써 지난 2010년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306명이 공식적인 6·25 전쟁 납북자로 인정됐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한국, 북한 모자보건 지원 사업에 1330만 달러 지원(8/11, 미국의 소리)
 - 한국 통일부는 세계식량계획(WFP)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북한 모자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1천330만 달러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 지원금액은 WFP에 700만 달러, WHO에 630만 달러로 총 1천330만 달러임.
 - 이 금액은 북한 어린이와 산모에게 영양식과 필수약품 등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사업이 결정되자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드레스덴 제안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한국 정부는 드레스덴 제안에 큰 거부감을 보여온 북한을 의식해 이번 지원이 드레스덴 제안과 직결된다고 해석되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임.
- 김의도 대변인은 이번 국제기구 지원 사업이 박 대통령이 밝힌 모자 지원사업과 관련성이 많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스위스, 대북식량지원 연간670만불(8/12,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가 이달 초 북한 주민에 영양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 (WFP)에 약 36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함으로써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1년간 유엔의 대북 식량지원 사업에 총 671만 달러를 기부했음.
- 이는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지원 사업에 참여한 7개국 중 최대 규모로 국가별 기금 총액인 1천395만 달러의 48%에 해당함.
- 스위스 정부의 지원금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사업인 '북한의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영양지원' 사업을 통해 굶주릴 위기에 놓인 북한의 180만여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쓰임.
-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실의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대북지원 사업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식량지원을 비롯해 산림농법전수 그리고 수질 개선을 위한 설비 등 세 분야의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힘.

■ 미 NGO, 80만달러 의약품 북에 전달(8/12,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의 대북 인도적 의료 지원단체 아메리카어스(Americares)는 지난주 북한에 80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이 도착하여, 평양, 황해북도, 평안도의 6개의 병원과 진료소로 나눠져서 분배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번에 제공되는 지원 의약품은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의약품 등이며, 이 밖에도 개인위생 용품과 의료 기기들도 함께 제공됨.
- 또 이번 의약품 지원이 이 단체가 계속 해오던 의료 지원의 일부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긴장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임을 강조했다.

- 남북협력기금 30억 투입 대북지원 사업 28개 단체 신청(8/13, 연합뉴스)
 - 통일부 관계자는 13일 남북협력기금 30억 원이 투입될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신청에 28개 단체가 37건의 지원 사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5건, 농업 17건, 축산 5건의 신청이 들어왔음.
 - 정부는 민간단체를 통하는 간접적 방식으로 농업, 축산, 보건의료 3개 분야에서 각각 10억 원, 총 30억 원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기로 하고 지난 15일 사업 신청 공고를 냈음.
 - 통일부가 심사를 거쳐 사업 단체를 선정하면 해당 단체는 북측 상대 단체와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나, 북한은 드레스덴 제안에 반감을 드러내 정부 재원으로 진행되는 지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인 상황임.

- 북, '국제기부금 따내기' 체제 정비 나서(8/13,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예산을 따내기 위해 산하 기관 정비 등 체제정비에 나섰으나,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시설 환경이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해 퇴짜를 맞고있음.
 - 북한의 보건 실태에 대해 잘 아는 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 들어 유엔 산하 국제기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거나 국제구호단체로부터 후원금을 따내기 위해 체제를 정비하는 중"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북한 정부의 체제정비는 주로 의료보건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서 출범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협회와 결핵병동 재건 등을 실례로 들 수 있다"고 언급했음.
 -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조선농인협회를 발족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조선맹인협회를 출범시켰는데, 이 맹인협회는 시력장애인들을 위한 '점글자(점자) 정보기술센터'를 설립하고, 각 지방에 있는 맹인 교육기관들끼리 서로 소통하는 장애자 교육망을 형성하고 있음.
 - 또한 이 장애인 협회들이 해당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선농맹경제문화교류사'도 출범시켰음.
 - 북한 정부는 유엔의 기부금을 받기 위해 필수인 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졸업생들로 전문 인력도 준비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국제기구로부터 지원받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미국과 독일 등 구호단체로부터 기술적 지원도 요청하고 평양시와 강원도, 황해도 지역과 함흥

지구에 결핵병동도 복원하고 있음.

- 캐나다 NGO, 북한에 메주콩 40t 지원(8/15, 미국의 소리)
 -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지원할 콩우유를 만드는데 필요한 메주콩 40t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근 평양에서 북한 보건당국과 대북 영양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음.
 - 수잔 리치 대표는 메주콩 40t을 9월 초 선적하며, 10월께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북한 어린이들 대다수가 여전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번 메주콩 지원으로 어린이 10만여 명에게 매일 두유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음.
 - 또한 메주콩 외에 두유 저장탱크와 20리터짜리 두유 용기 100개를 곧 북한에 지원할 예정인데, 두유 저장탱크는 북한 측의 요청으로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중국 수송회사가 북한에 보내기 위해 준비 중에 있음.
 - 한편 지난 5일부터 방북해 북한 보건성 산하 의과학원 관계자들과 영유아 영양실조 방지, 성장 촉진, 임산부의 태내 빈혈과 영양결핍 예방을 위한 복합 미량영양소(스프링클스)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함.
 - 또 현재 북한에 보낼 스프링클스 약 250만 포를 확보해 놓은 상태라며, 두 달 안에 북한에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음.

- 스위스 정부 지원 분유 650t 북한 도착(8/15, 미국의 소리)
 - 토머스 피슬러 스위스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장은 지난 3월 보내 지난 5월 도착 예정이었던 380만 달러어치 상당의 분유 650t이 이번주 남포항에 도착했다고 설명함.
 - 분유는 영양과자 공장 두 곳과 '수퍼 시리얼'로 불리는 '혼합가공식품' 공장에 보내져 북한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영양식품을 만드는데 사용될 예정임.

8. 북한동향

- 국정원의 '중앙합동신문센터→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이름 교체에 대해 "내외여론을 녹잡히기(※가라앉히다) 위한 눈가림식 요술, 유치한 광대놀음"이라고 연일 해체 주장(8.10, 중앙통신·민주조선)
- 주한미군의 '기지촌 성매매'는 "조선여성들에 대한 모독이고 극악한 반인권 만행이며 현대판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8.10, 중앙방송/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현대판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
- 北, 인권연구협회 창립 22돌 즈음 '인권보고서' 발표 예정(8.11, 중앙통신)
 - 오늘 적대세력들이 공화국을 헐뜯고 모해하기 위해 여론을 오도해 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조건에서 공화국의 인권실태를 정확히 알리고 그릇된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며
 - 종합적인 인권보고서가 발표되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비열한 책동을 폭로 단죄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 駐韓美軍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 성매매' 관련 재차 韓美당국에 '인간이기를 그만둔 야수의 무리, 수치도 모르는 패륜아들'이라며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사대매국노들의 반역통치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인민들이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비난(8.11, 중앙통신·노동신문/반드시 결산해야 할 침략군의 성노예범죄)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